

Left21.com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특별 호외 | 2011년 12월 21일 | 값 500원

리포트21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이명박이 위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청와대 벙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이명박 속으로 이 상황을 위기 탈출에 이용할 공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글은 12월 20일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다.

조선중앙방송은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일인 통치권을 물려받은 뒤 17년 동안 북한을 통치했다. 후계자 지위에 오른 뒤부터 따지면 무려 37년 동안 그는 북한의 최고 권력자였다. 그는 자신이 목표로 내세운 강성대국을 이루지 못하고, 1990년대 이래 계속된 북한의 심각한 경제 위기와 북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유산으로 남겼다.

북한의 미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모호하게 뒤덮여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를 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 지도자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후계 구도가 빨리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대물림 받았을 때 그는 50세가 넘었고 후계자 훈련도 20년 넘게 받았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은 아직 28세이고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다. 게다가 그가 물려받은 유산은 지난 20년 동안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나라다.

권력이 집중돼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계기로 관료 내 분열이 일어나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불안정은 중국에서 분출될지 모를 거대한 저항 등 특정 상황과 맞물리면 아래로부터의 격변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증대 가능성

중국·일본·남한 같은 주변국들은 북한의 불안정이 동아시아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특히 중국은 대량 탈북 난민이 밀려들어 사회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우려해 대북 지원을 해 왔다. 물론 여기에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처럼, 미국과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 북한의 존재가 하는 구실에 대한 고려도 작용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

는 불안정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분출이라면 더욱 그렇다. ‘미국은 북한의 불안정을 원하므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 북한을 흔들려 할 것이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퍼져 있는데, 이 점에서 그런 생각은 일면적이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에도 미국은 북한의 안정을 선호했고 석 달 후 제네바 합의를 이뤘다. AP통신은 그즈께인 12월 18일 북·미가 우라늄 농축 중단과 식량 지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는데, <한겨레>는 이 합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점 뒤에 이뤄졌다고 했다.

물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한은 북한의 불안정을 이용할 만반의 태세가 돼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권력 교체기인 현 상황을 이용해 새로운 권력층이 자신에게 친화적이 되도록 서로 암투를 벌일 것이다. 또, 북한의 불안정이 격화하는 상황에서는 자국 영향력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 투입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부상과 그것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동아시아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음에 따라 북한의 불안정이 갖는 파급력이 전보다 커질 수 있음을 뜻한다.

남한 현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한다며 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를 지시했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워치콘(대북정보감시태세)을 격상하지 않고 ‘차분한’ 대응을 하겠다면서도, 정찰기를 늘리고 전투기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마치 지금 당장 북한의 ‘군사도발’이나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은 호들갑이다. 오히려 이런 호들갑 자체가 북한을 경계하도록 만들어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남한의 호들갑은 북한의 맞대응을 불렀다.

» 2면으로 이어짐

벙커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이명박

부패한 정권의 위기 탈출 시도를 막아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듣고 이명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 사망 정국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이명박의 수많은 악재들이 빨려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방금 전까지 이명박은 사방에 묻혀 있던 지뢰가 터지면서 발 디딜 곳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다.

먼저, 이명박 친인척 비리가 연쇄 폭발하듯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이명박 친형, 사촌처남에 이어서 손위동서 두 명의 비리 연루가 밝혀지면서 ‘도대체 비리와 무관한 친인척이 있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정권’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이상득 비서들의 계좌에서는 괴자금 8억 원이 발견됐다.

측근 비리도 만만치 않다. ‘왕차관’ 박영준은 이국철 게이트뿐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 카메론 다이아몬드, 미얀마 가스 등 여러 건의 의혹을 달고 있다.

박근혜 친인척과 측근까지 비리에 엮여 있다. 박근혜 동생 박지만은 삼화저축은행의 로비를, 측근 이성현은 부산저축은행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민주당은 내국동 사저 게이트, 삼화저축은행 게이트, 이국철 게이트, 김재홍 게이트, 이상득 게이트, 박영준 게이트 등 무려 6개의 게이트 대응팀을 꾸린 상태였다. 심지어 전 검찰총장 김준규는 “내가 열 받아서 [알고 있는 일] 다 까버리면 국정 운영이 안 된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대로 묻히는가 싶었던 BBK 문제까지 며칠 전 다시 불거졌다. BBK 사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읍서넵캐피탈이 미국 법원에 다스의 실소유주를 가려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사기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방금까지 이명박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결정타는 ‘청와대의 디도스 은폐’ 의혹이었다. 청와대 정부수석실이 경찰청장 조현오에게 직접 디도스 수사 결과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조현오도 청와대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압력 때문에 디도스 범행 전담 줄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과 관련된 돈 거래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에서 빠졌



김민준

이 정부가 워낙 부패하고 레임덕이 심각하기 때문에 위기 지연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그야말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대통령 닉슨을 몰러나게 했다. 통합진보당은 《한겨레21》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명박 정권이 임기를 다 못 채울 수도 있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명박 탄핵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한나라당에서조차 “핵폭탄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위기의식이 점증하고 있었다. 이것은 가까스로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명백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김 위원장 사망 속에 묻히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니 ‘이명박과 측근들이 지금 벙커 속에서 웃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사이버 공안정국

이런 엄청난 정치 위기를 벗어나고픈 바람에서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이명박의 첫 반응도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할 것이 아니라 힘을 모을 때라는 뜻이다. 박근혜 비대위도 출범 기자회견에서 디도스 사건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이 다른 곳으로 쏠린 틈에 빠져나간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친북·종북’ 관련 게시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과 채증 작업”을 하겠다며 ‘사이버 공안정국’ 조성에 나섰다. 이명박이 호들갑을 떨며 벙커에 기어들어가 군과 경찰, 정부 각 부처에 비상체제 돌입을 지시한 것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 위원장 사망에 비상 대응하기 위해’라며 국회에 등원했다. ‘이명박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려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결국 또 기회주의적 본색을 드러내며 진보진영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 때도 이명박과 우파들의 노림수는 비슷했

다. 천안함 사건 때 보수 언론은 ‘천안함 추모 열기 속에서 대정부 투쟁 등 탄길로 가고 있다’며 진보진영을 공격했고, 연평도 사태 때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민간인 사찰 파문 등 각종 악재를 가리는 데 이용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탄압도 이어졌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용해 정치 위기에서 탈출하고, 내부 저항을 억누르고, 좌파를 마녀사냥하는 것은 지배자들의 오랜 꿈수였다. 극우 조감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김 위원장 사망을 기점으로 “남한의 종북세력 단죄”에 나서자고 주장한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도 당시 김영삼 정부와 우익들은 ‘조문 파동’을 일으켜 대대적인 좌파 마녀사냥에 나선 바 있다.

물론 국내외의 여러 모순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일관되지 않을 듯하다. 지배자들이 북한 체제와 정권의 불안정을 꼭 달가워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 천안함 북풍은 오히려 역풍을 부른 바도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북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일부 자본가들의 목소리도 있고, 미국 정부의 대응도 눈치껏 살펴봐야 할 처지다.

〈조선일보〉도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강조했고, 〈중앙일보〉는 “조문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정부와 국민에게 당부”했다. 한나라당과 우파 일각에서도 “정부 차원의 조문” 주장이 나왔고 결국 이명박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를 표명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신중한’ 태도로 일부 진보진영 지도자들을 다독이면서도, 이 상황을 이용해 위기에서 탈출하고, 저항을 억누르고, 좌파를 마녀사냥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의 이런 의도를 간파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숨통이 풀리면서 다시 온갖 악행을 재개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것을 두고볼 수는 없다. 남북한 체제 모두에게서 독립적인 정치와 입장을 가질 때 더 효과적으로 이런 시도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전지윤

비방과 찬양 뒤의 진실

김정일, 그는 누구였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보수 언론 들은 일부 근거 없는 소문까지 섞어서 그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같은 독재자를 찬양해 온 우익들이 ‘독재’ 운운하며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다.

물론 그렇다고 김 위원장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하고 미화하는 북한 관료와 남한 진보진영의 일부 인사들의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니다. 북한 정권은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려고 김 위원장의 출생지를 백두산으로 조작하고 그의 이력을 과장해 영웅으로 떠받들어 왔다.

‘후계 체제’ 지지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

이 권력을 대물림 받은 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보인 타고난 능력 덕분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후계자로 부상한 것은 1960년대 후반 지배 관료 내 일부를 숙청하는 과정에 앞장서면서부터였다. 당시 북한 체제는 모순을 드러내며 위기에 빠졌고, 지배 관료들은 분열했다. 이때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경제 모델을 고수하고 억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리고 그는 1970~80년대 인민 대중을 동원하고 억압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주체사상 확립’에 앞장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남한 우파들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긴장을 불러온 주범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사실 미국이 북한을 악마화하며 위기를 조성한 게 한반도 위기의 진정한 배경이었다.

선군정치

미국이 이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북한을 ‘불량국가’로 몰고 압박하면서 북한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북한은 기존의 ‘자력갱생’적 축적 모델이 파산하면서 끔찍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미국의 압박과 체제의 위기에 대처하고 내부 불만을 제압하려고 거듭 군사적 방법에 의존했다. ‘선군정치’라

는 이름으로 미사일과 핵 개발에 우선순위를 뒀고, 위기의식을 팽배하게 해 인민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도록 만들었다.

그는 제국주의에 맞서 사회주의와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며 이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선군정치는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과 무관하다. 인민 대중이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식량과 생필품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우선순위를 놓는 것도 노동계급 자기 해방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지배 관료들의 방식은 진정한 반제국주의도 아니었다. 그들은 파산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제국주의 열강들의 도움을 원했

다. 그래서 2002년 김 위원장은 당시 일본 총리 고이즈미에게 “부시 대통령과 밥 새 목이 쉬도록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면 한반도에 미군이 남아 있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도 표명해 왔다.

전에 김정일은 방북한 정주영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는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지만 사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잘 압니다. 꿈에서 돌팔매를 맞았는데 돌 던진 사람이 첫 번째 미국 사람, 두 번째 남한 사람, 그리고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익